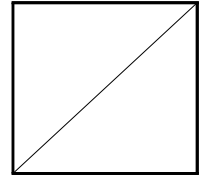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65 호
의 결 연 월 일	2020. 7. 22. (제 14 차)

의
결
사
항

(주)상상인증권(舊 골든브릿지투자증권) △△△에 대한
직권재심 처리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0. 7. 22.

1. 의결주문

(주)상상인증권(舊 (주)골든브릿지투자증권) △△△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18년 제18차 금융위원회(“18.10.24.)는 (주)상상인증권 ◆◆◆◆ △△△의 ‘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’ 등에 대하여 “문책경고”로 조치 하였으나,

서울행정법원은 (주)상상인증권 및 ◆◆◆◆ △△△ 등이 제기한 조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‘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, 이에 따라 △△△에 대한 “문책경고” 조치를 취소하고자 함

* 기존 조치시 동일 검사에서 3개의 위법·부당행위가 경합하여 문책경고로 1단계 가중 하였으나, 금번 취소된 처분사유가 없었다면 기존 조치시 가중할 다른 사유가 없으므로 타 조치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중 적용을 취소하고자 함(문책경고 → 주의적경고)

3. 주요골자

2018년 제18차 금융위원회의 (주)상상인증권 ◆◆◆◆ △△△에 대한 원조치(문책경고)를 취소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7.2.) 심의필

<별지>

(주)상상인증권(舊 (주)골든브릿지투자증권) ◆◆◆◆ △△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☐ 임직원에 대한 조치

- ◆◆◆ △△△ : 원조치(문책경고) 취소*

* 처분사유 중 일부 취소로 가중 적용 취소(문책경고 → 주의적경고)

- 직권취소 사유

-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사유 중 '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'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

- 법적근거 :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37조 제5항

2. 조치사유

가.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

- ☐ 서울행정법원은 (주)상상인증권 및 ◆◆◆◆ △△△ 등이 제기한 조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‘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(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),

-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에 준하는 직권재심 사유에 해당하므로 2018년 제18차 금융위원회(‘18.10.24.) 의결에 따른 △△△에 대한 원조치 (“문책경고”)를 취소하고 “주의적 경고”로 재조치하고자 함

관계법규

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】

제40조(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) 금융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5.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

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】

제43조(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) ⑤ 법 제40조 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다만,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,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,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
6. 지급보증업무

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】

제37조(이의신청) ① ~ ② (생략)

-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.

1. 금융위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을

금융위에 지체없이 통보하고,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·변경 또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금융위에 건의한다. 다만,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.

2.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,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.

⑤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·누락,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】

제61조(이의신청) ① ~ ⑧ (생략)

⑨ 규정 제37조 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 제재실시부서장은 직권재심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·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,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.

⑩ 제9항에 의한 심사·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 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⑪ ~ ⑫ (생략)

직권재심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주)상상인증권(舊 (주)골든브릿지투자증권)

2. 직권재심일 : 2020. 7. 22.

3. 직권취소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(주)상상인증권 (舊 (주)골든브릿지투자증권)	· 처분사유 중 일부 취소('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')
임원 (1명)	· 처분사유 중 일부 취소('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') · 문책경고 취소 후 주의적경고로 재조치

4. 직권취소 사유

가.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

□ 서울행정법원은 (주)상상인증권 및 ◆◆◆◆ △△△ 등이 제기한 조치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'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'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(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),

○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에 준하는 직권재심 사유에 해당하므로 2018년 제18차 금융위원회('18.10.24.) 의결에 따른 △△△에 대한 원조치("문책경고")를 취소하고 "주의적 경고"로 재조치하고자 함

< 관계법규 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40조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43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금융투자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53	02-3145-7015